



## 학부제와 다전공제

배 규 한 | 국민대 사회과학부 교수

이 글에서는 1995년부터 시작된 한국 대학교육 개혁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 후, 대학교육 체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학부제, 모집단위 광역화, 다전공제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교수와 학생, 총장들까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학부제 폐지가 과연 타당한지, 아니면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논하기로 한다.<sup>1)</sup>

### I. 교육개혁의 시대적 배경

1980년대 말 세계적 화두는 단연 '개혁'이었다. 그것은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나타난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필사적 노력이었으며, 그러한 장기적 노력의 핵심은 교육 분야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각급 학교에서 기초분야 학문의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

한국에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1995년 4월 27일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신교육 구상'이 발표되었고, 5월 31일에는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기본 방향은 학습자 중심, 교육의 다양

화, 자율과 책무성, 교육의 수월성 추구 등이었다 (교육개혁위원회, 1995).

교육개혁의 핵심은 '21세기를 위한 대학 모형의 다양화'와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공이수학점을 낮추는 것'이었다(교수신문, 2001. 11. 28).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분야간의 연계성이 커지면서, 과거와 같이 분야를 세분하여 연구하는 분석적, 환원적(reductive) 방법으로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체적 시각 또는 학제간 연구의 중요성이 커졌고, 세분화된 학과 중심의 교육체제는 학문 발전을 가로막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고등교육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은 1996년 이후 각 대학의 교육개혁 내용을 평가하는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교육개혁의 구상을 가장 잘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개혁의 지표를 만들어 모든 대학에 제시한 다음, 영역별 항목에 대한 추진 성과들을 보고하게 했다. 그리고 보고 내용에 대한 서면평가와 실사를 통해 분야별로 최우수 대학과 우수 대학을 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 억 원씩 재정 지

1) 이 글은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주최 학술 세미나 (『새 정부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2003. 1. 17.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필자가 발표했던 논문 "인문사회과학의 쇠퇴와 학부제 문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원을 해 주었으며, 추진 실적이 부진한 대학에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었다.

교육개혁 평가가 시작되면서 대학 모형을 다양화하기 위해 “모집단위를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것이 1998년 이후 ‘학부제’ 도입 권장의 근거가 되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인문계의 경우 문학, 역사, 철학, 그리고 이공계의 경우 수학, 화학, 물리학, 생물학 등의 기초를 바탕으로 생성소멸주기가 더욱 빨라진 응용학문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길러 주자는 것이었다.

각 대학은 교육개혁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주로 지원금이나 행·재정적 불이익 때문이기도 하지만,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의 이미지 제고(또는 실추)는 전국의 모든 대학을 평가게임에 몰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러다 보니 개혁의 내용보다는 평가결과에 더 집착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으며, 이러한 평가 위주의 개혁 과정은 갖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교육개혁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대학 개혁의 주체인 총·학장과 교수들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개혁은 정작 선진국들이 중시하는 기초학문 분야를 오히려 쇠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전혀 연관이 없는 학과들을 하나의 학부로 운영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기초학문 분야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전공교육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 II. 학부제에 관한 몇 가지 오해

교육개혁 이후 대학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학부제 도입이었다. 이것은 대학의 기본조직을 바꾸는 것으로서 교육개혁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학부제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여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모집단위 광역화’와 ‘다전공제’가 당연히 학부제에 포함되는 개념인 양 혼동하며, 그 공과를 논할 때도 함께 뒤섞여 논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먼저 이들 각 개념의 의미와 상호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학부제 자체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다. 5·31 교육개혁안에서 교육개혁위원회는 ‘학부’를 미국의 연구중심대학의 학부를 의미하는 ‘유니버시티 칼리지’로 정의했다. 이 때 학부란 전문 응용 분야(예컨대 의학, 법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등)를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기 전에 그 기초가 되는 학문들(예컨대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을 폭넓게 공부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복합적 현상에 대한 학제간 접근을 어렵게 하는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폭넓은 학문적 기초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을 지닌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를 ‘두 개 이상의 유사학과를 통합한 대과(大科)’로 규정했다. 교육개혁안에서 정의한 학부제는 교육과정의 구조 내지 내용에 대한 개념인 반면,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정의한 학부는 학생 모집단위에 대한 행정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교육개혁안에 제시된 학부제를 단순한 모집단위 광역화와 연계시켜 추진하다 보니, 무조건 몇 개의 학과를 하나로 묶어 ‘학부’라고 명명한 무늬만의 학부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학부제 도입 여부를 교육개혁의 주요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키면서 그 내용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형식만 평가 기준으로 삼았기 때

문이다.

현재 다수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부제는 '학부 아닌 학부제'이다. 이것은 겉포장만 학부제이지 교육과정, 교수활동, 학생들의 수강 내용을 보면 전혀 학부제가 아니라는 뜻이다.<sup>2)</sup> 학부제는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그 개념이 왜곡되거나 현실적 적합성을 상실한 채 전국의 모든 대학에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오로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대학 실정에 맞든 맞지 않든, 기초 분야든 응용 분야든 가리지 않고 가능하면 많은 분야를 무늬만의 '학부제'로 개편하는 열풍 속에 휩쓸렸기 때문이다.

둘째, 학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사용하는 '전공'의 개념도 혼란의 대상이다. 학부제에서 '전공'이란 교수의 소속을 지칭하는 것이고, 학생은 '학부'에 속해 있을 뿐 어느 특정 전공에 속하지는 않는다. 즉, 종전의 학과 체제에서는 학과가 교수 조직이면서 동시에 학생 조직이었지만, 학부제에서 전공은 교수들의 학문 분야일 뿐 학생들은 모두 학부라는 하나의 조직에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교수신문, 2001. 12. 24). 학과 체제에서는 각 학과가 행정의 최소 단위였지만, 학부제에서는 전공이 아니라 학부가 하나의 행정 단위가 되어야 한다.<sup>3)</sup> 그런데 몇 개의 학과를 묶어 학부로 만들어 놓고는 각 '전공'을 종전의 '학과' 개념 그대로 독립된 행정 단위 또는 학생조직 단위로 운영하다 보니<sup>4)</sup> 온갖 혼란이 야기된 것이다.

셋째, 흔히들 다전공 제도는 학부제에서 시행되

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전공과 학부제는 서로 친화성이 큰 개념이긴 하지만 반드시 같이 시행할 필요는 없는 별개의 제도이다. 다전공 제도란 '재학 중 2개 또는 3개의 전공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졸업 시 2개 또는 3개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학부제는 다양한 전공 기초 과목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인접 학문, 타학문과의 학제간 연구를 가능하게 하며, 전공 선택에 앞서 전문인이 갖추어야 풍부한 '교양'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다전공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반드시 학부제가 되어야만 다전공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소 전공이수학점의 수를 줄이고 타 전공과정 이수를 허용하면, 반드시 학부제가 아니더라도 다전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모집단위 광역화도 학부제와 친화성이 큰 개념이긴 하지만, 반드시 같이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집단위 광역화는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구체적인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 입학 후 다양한 전공에 대한 탐색 기간을 거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나중에 전공 선택시 학생들이 인기 전공 분야로 몰리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학생들은 교과과정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해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학부제 하에서 학생들은 여러 전공들을 포함한 학부로 입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광역화된 모집

2) 5·31 교육개혁의 '기획자'이자 그 후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명현 서울대 교수는 "교육개혁의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학생, 교수, 사회를 모두 망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의 학부제는 사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교수신문, 2001. 11. 28).

3) 학과제에서는 전공하는 학생이 없으면 그 학과가 존속할 수 없지만, 학부제에서는 전공하는 학생이 없더라도 어떤 전공의 개설 강도가 많으면 오히려 그 전공의 교수들을 더 뽑아야 하는 것이다(김형철, 1998b, p. 64).

4) 학부제 시행에 대한 준비도 없이 무리하게 서둘러 학부제 개편의 실적만 가시화하려고 하다 보니, 교수들을 쉽게 설득하기 위해 학부제로 묶더라도 각 전공은 종전 학과의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준 것이다.

단위로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 계열별 입학 제도에서 보듯이 학부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모집 단위를 광역화할 수 있다.

### Ⅲ. 현황과 문제점

교육개혁은 미래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선진국 도약을 가능하게 해 줄 통로로 여겨졌다. 많은 교육개혁 내용 중에서도 학부제는 바로 교육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가장 가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핵심적 내용으로 강력히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학부제는 교육개혁의 온갖 부작용을 초래하는 문제의 근원으로 비판받고 있다.<sup>5)</sup>

과연 학부제는 기초학문을 고사시키는 주범이며 폐지되어야 마땅한 제도인가? 지금 한국에서 학부제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들을 보면,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함께 도입된 관련 제도들 내지는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에 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개혁의 목표는 대학의 자율성, 다양성 신장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대학을 타율적이고 획일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추진 과정에서 다양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놓고 모든 대학들을 이에 따르게 했으니 결과적으로 타율화,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

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개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지침을 제시했을 뿐 개혁의 내용은 각 대학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재정적 지원 또는 불이익을 내세운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는 각 대학들로 하여금 거의 강제적인 의미로 받아들여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둘째, 학부제는 구체적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폭넓은 전공 기초를 다질 수 있게 함으로써 기초학문 분야의 중요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왜곡된 학부제 하에서 기초학문 분야는 오히려 존폐의 기로에 처하게 되었다.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을 함께 묶어 학부를 구성하거나, 학부 안에서 사실상 전공별 구분이 그대로 잔존하는 상태에서 학생들 대다수가 응용 분야로만 몰리는 전공 편중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sup>6)</sup> 결국 현행 학부제는 '기초학문 연구자의 정예화'라는 원래 취지와는 반대로 기초학문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오히려 실용학문이 득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교수신문 2001. 6. 25).

셋째, 학부제와 함께 도입한 다전공 제도는 학제 간 연구와 다양한 분석시각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전공교육을 줄이는 결과만 초래했다. 전공이수학점 수를 거의 반으로 줄인 것은 다전공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정작 학생들은 다전공을 별로 하지 않고 대부분 최소전공이수

5)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교육정책 중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부제'(31.3%)가 지적되었다(교수신문, 2001. 5. 28). 기초학문 분야 교수들은 "기초학문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학부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했다(교수신문, 2001. 10. 29). 국·공립대 인문대학 협의회도 인문학 연구와 교육 기반 붕괴에 대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학부제를 꼽고, 획일적인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부제의 폐지를 요구했다(동아일보, 2001. 11. 21). 국·공립대 총장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학부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전혀 관련성이 없는 학과들을 하나의 학부로 운영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한 비인기 분야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인기학과는 인적·물적 자원이 모자라 부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동아일보, 2002. 6. 21).

6) 응용 분야인 공대와 경영대의 경우는 인문대나 사회대, 자연대보다 전공 편중 현상이 적은 편이다.

학점만 채운 뒤 나머지는 학점 따기에 쉬운 과목 중심으로 졸업 이수학점을 채우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폭넓은 공부보다는 오히려 전공 공부를 알게 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넷째, 다전공 제도는 폭넓은 전공 분야의 기초를 다지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오히려 전공 강의의 질을 교양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전공을 장려하기 위해 대부분 전공과목에서 필수 또는 선수과목 지정용 해제했는데, 학생들은 공부하기 쉬운 과목만 들으려 하며 정작 전공의 핵심 과목은 기피하기 때문이다.<sup>7)</sup> 더구나 대부분의 전공과목 수강생 중에 기초과목을 들지 않은 학생들이 다수 섞여 있기 마련이므로 자연히 강의 수준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비인기 전공의 경우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강의를 쉽게 해야 하고,<sup>8)</sup> 반면에 학생들이 몰리는 전공에서는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해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

#### IV. 개선 방향

교육개혁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학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부제는 대학 또는 전공 영역에 따라 많은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하고 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제기된 문제들은 대부분 학부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강요된 개혁 추진, 왜곡된 학부제, 그리고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학부제는 당장 폐기해야 할 나쁜 제도도 아니고, 그렇다

고 무조건 확대해야 할 유일한 개혁 방안도 아니다. 따라서 도입의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줄이고 보완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교육개혁 이후 야기된 문제들에 대해 모두가 열린 시각으로 문제의 핵심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교수들은 인문사회과학 홀대나 기초과학 분야 쇠퇴의 원인이 학부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사실 문제의 근원은 크게는 경제 성장 제일주의에 물든 사회 풍토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무리한 개혁 추진과 왜곡된 학부제 시행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개혁이 곧 '학부제 도입' 또는 '모집단위 광역화'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개혁의 내용을 더 이상 모든 대학, 모든 분야에 획일적으로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마다 규모나 학생들의 수준이 다르고, 환경과 여건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률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얼마나 부응하는지 그 '형식'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개혁 방안 모색의 결과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바람직한지 그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는 획일화, 타율화의 부작용보다 훨씬 적으며, 그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기도 더 용이할 것이다.

셋째,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부제 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대학에 위임해 주어야 한다.<sup>9)</sup> 대학원에 진

7) 예컨대 사회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사회학사나 사회학이론, 통계학, 조사방법론 등은 피하고 인구론, 성(性)과 사회, 스포츠, 여가생활 등만 들으려 하는 것이다.

8)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학부에 속해 있는 전공들 간에 강의를 쉽고 재미있게 하는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9) 교육인적자원부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대학에 자율권을 주면 교육개혁이 후퇴하고 대학교육이 부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학의 장래는 소속 교수들이 더 걱정할 문제이며, 대학교육의 미래지향적 방향에 대해서도 교육인적자원부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 인력을 지닌 대학들이 더 깊이 연구하여 결정할 것이다.

“

학부제는 당장 폐기해야 할 나쁜 제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확대해야 할 유일한 개혁 방안도 아니다.  
따라서 도입의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줄이고 보완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

학하여 전문가가 될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중심 대학에서는 학부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사회로 진출하는 학부 중심 대학에서 학부제를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가 무조건 모집단위 광역화 등 외형적 측면만 평가하게 되면, 점점 더 형식적인 학부제를 조장하게 되고 부작용도 더 커질 것이다. 또한 유사전공 간의 통합은 확대해야 하겠지만, 별 유사성도 없는 학과들을 묶어 놓은 형식적인 학부는 학과군이나 학과로 재편해야 한다. 실제로 학생을 학과별로 선발하더라도 전공이 수학점을 낮추어 다전공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교육개혁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교수신문, 2001. 11. 28; 12. 24).<sup>10)</sup>

넷째, 학부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대학원 운영, 교과과정 개편 등의 전제 조건

들을 갖추어야 한다. 올바른 학부제의 정착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법학, 의학, 경영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등 직업과 관련된 응용 분야들은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올리고, 학부과정에서는 없애야 한다.<sup>11)</sup> 또한 교과과정도 이러한 개혁에 맞추어 개편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학부에서 기초학문 분야가 활성화되고,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유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sup>12)</sup> 학부제라고 해 놓고는 대학원에서 가르쳐야 할 전공과목들을 학사과정에서 가르치다 보니 강의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교수신문, 2001. 11. 28).

다섯째, 다전공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나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고, 아울러 전공 강좌의 수준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전공 제도는 교육개혁의 취지에 잘 부합하지만, 필

10) 대학에 자율권을 주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행 학부제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나올 것이다. 예컨대 전공 편중 현상을 조정하기 위해 전공예약제를 확대하거나 일정 비율을 전공별로 모집할 수도 있고, 학과제 하에서 다전공 제도를 활성화할 수도 있으며, 비인기 기초분야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학금의 80%를 이 분야 학생들에게 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김형철, 1998b, 67).

11) 미국에서도 학부제를 시행하는 연구 중심 대학에는 이러한 전공들이 없으며, 직업교육에 치중하는 대학들에서만 이러한 전공을 학부과정에서 가르친다.

12) 예컨대 법학, 경영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등을 학부에서 40학점씩 따고 졸업하면 결코 그 분야의 전문인이 될 수 없다. 전공 기초가 부족한 열지기 전문인이 될 뿐이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고자 한다면 학부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다음 법률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 경영인이 되고자 한다면 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다음 경영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 정치부 기자가 되고자 한다면 학부에서 먼저 정치학을 공부한 후에 신문방송전문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김형철, 1998a, 95).

수과목과 선수과목 지정, 수강생 수 제한 등을 통하여 전공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전공자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초기에는 대략 10% 미만이었으나 지금은 20%를 상회하고 있으며,<sup>13)</sup> 다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타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대학이나 전공 영역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사범대학의 경우 다전공자 비율은 40%를 넘는데, 이것은 임용고사에서 다전공자에게 가산점을 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교수신문. 2001. 5. 28. "학부제, 시행 4년째 득보다 실"  
 교수신문. 2001. 6. 25. "학부제 어디로 가고 있나 -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부제로 몸살 앓는 대학가"  
 교수신문. 2001. 10. 29. "집중진단: 학부제 어디로 가고 있나 4 - 학부제로 얻은 것"  
 교수신문. 2001. 11. 28. "집중진단: 학부제 어디로 가고 있나 5 - 학부제 기획자에게 듣는다"  
 교수신문. 2001. 12. 24. "좌담: 학부제 평가와 기초학문을 살리는 길"  
 교수신문. 2002. 6. 27. "쟁점: 학부제 수정 요구 높아지는 대학가"

교육개혁위원회. (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5. 31 제2차 대통령 보고서.  
 김형철(1998a). "학부제의 이상과 현실". 『대학교육』 1 · 2월호. pp.89~96.  
 김형철(1998b). "효율적인 학부제 운영방안". 『대학교육』 11 · 12월호. pp.62~73.  
 대통령비서실(1995).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신교육 구상" 4. 27.  
 동아일보. 2001. 11. 21. "국·공립대 인문대 학장, 학부제 폐지 요구"  
 동아일보. 2002. 6. 21. "학부제 부작용 많다"  
 배규한(2003). "인문사회과학의 쇠퇴와 학부제 문제".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주최, 교육인적자원부 후원 학술세미나, 『새 정부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2003. 1. 17.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자료집. pp.179~194.

배규한

서울대 사회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Urbana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통령자문21세기위원회 위원, 전국대학교학생처장협의회 회장, 국민대 사회대학장, 학생처장, 학보사 주간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국민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미래사회학』, 『조사방법론과 사회통계』, 『학생운동과 대학생 자치활동』, 『Automobile Workers in Korea』 외 다수가 있다.

13) 숫자는 주위 몇 대학에서 본 추정치일 뿐 정확한 통계치가 아님.